## 어김없이 또…거짓으로 수당 훔친 공무원들

근로기록 조작·허위 초과수당 신청 등 '눈먼 돈' 인식 만연 '4년간 부정 수령' 광주시청 직원 20명 입건 등 잇단 수사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잇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직자로서 '청렴'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눈 먼 돈으로 여기며 오히려 부정 행위 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지역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관리·감독 부실이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13일 광주시 북구 소속 6급 공무

원인 50대 A씨를 사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입 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 근무 기록을 1시간씩 몰래입력해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해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갑질 의혹 등으로 광주시인사위 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아 현재 정 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직원 등 20명 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8일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광주시의 자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인원을 특정했으며, 허위 근무시간과 수당 규모, 횟수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 련한 자체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150여명 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자체 감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광주시청 주차 장 출차 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림잡아 150여명 의 공무원들이 주말·휴일 등에 출근 등록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다시 복귀해 퇴근 등록을 한 정 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직원들에 대한 개별 감사를 거쳐 지난 달 29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등은 이달 말 재심의 신청 기 간 및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처분이 확정된 이후 정 해죄 저막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시민의 입장에서이는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행위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고 정부에서 근원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내에서도 내부 관리·감독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통해서 광주시 직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충장축제 홍보하는 동구청장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을 앞두고 13일 동구 빛의 읍성 일원에 조성된 테마 거리에서 임택(가운데) 동구청 장과 충장축제 유랑단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인권도시 맞나…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

이동대기시간 61.8분 '전국 최장' …택시·버스 타려면 '한 시간'

광주 지역의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등 전국 최하위권의 이 동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이 국토교통 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행현 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특별교통수단 평 균 승차 대기시간은 61.8분에 달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 비와 자동 승강 장치 등을 갖춘 차량으로, 이동이 불 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이 병원 진료나 출근, 외출 시 이용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가리킨다.

광주의 승차 대기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경북(55.0분), 전남(50.5분)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의 승차 대기 시간은 전국 평균인 35.7분의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황 의원은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수요는 늘어 나는 데 비해 운행대수는 늘지 않는 등 공급이 부족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특별교통수단 이용 실적은 2022년 858만여

건에서 2023년 942만건으로 사이 83만여건 증가한 데 비해, 운행대수는 4268대에서 4600대로 332 대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18건, 2022년 33건, 2023년 33건, 2024년 52건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라며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현장의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민경기자 minky@

## 밭떼기 계약 어겼다면 위약금은?

광주지법, 해남 문내농협 손배소 항소 기각…"계약금의 40%만"

해남의 지역 농협이 배춧값 급등을 틈타 '밭떼기' 계약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배추를 팔아넘긴 농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약금 청구액의 40%만 받아내는 데 그쳤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박종환)는 문내농협이 농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 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약금을 낼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류에 기재된 계약금 만큼 만 돌려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문내농협과 겨울배추 5만3934kg을 계약재배하는 이른바 약정을 체결했다. 문내농협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 1440만원을 A씨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2개월여 뒤 배추 가격이 30~50% 폭등하자, 문내농협이 아닌 제3자에게 배추를 전량 처분했다.

이에 농협은 A씨가 계약을 위반한 데 따라 농 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 측은 A씨가 계약재배 약정에 따라 계약 금의 2배 규모인 28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 계약금 1440만원, 위약금 14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서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미출하 계약보증금 해당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은 계약보증금 지급액에 미출하 물량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40%로 규정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농협 측 주장과 달리 A씨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40%(576만원)만 내면 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이 계약 금액 1440만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 이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제3자에게 배추 를 처분해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내농협 관계자는 "계약금까지 완납한 농가로부터 받기로 한 납품 물량이 갑자기 사라지니 농협은 15억원 규모 거래처와도 거래가 끊겼고, 거래처에도 손실 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영업 손실이 상당하다"며 "재판에서는 전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억울함이 남지만, 농민의 편에 서서 손실을 감수하고 상고를 하지 않을 방 침이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수능시험장 86개교 지정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 험생 지원을 위해 '2026학년도 수능 26지구 광 주 관리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본부는 수능 컨트롤타워로서 수능 세부 시행계획 업무처리 지침 점검, 문답지 운송 보관 상태 점검, 시험장·시험실 감독관 배치와 점검, 부정행위 예방대책 시행, 긴급재난 발생 시 시험장시험실 조치, 수능 시험일 비상 상황 발생 시 현

장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한다.

광주지역 일반시험장 40개교와 예비 시험장 (재난 대비) 1개교를 지정해 645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시험장마다 환자 대비용 별도 시험실 1실과 미응시자 대기실 1실 등을 마련한다.

전남도교육청도7개시험지구(목포·여수·순천 ·나주·광양·담양·해남)에서 총 46개교의 시험장 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